대법·헌재도 '사퇴후 임명' 의견 냈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절차 논란 새국면

청와대와 사전조율…정치권 공방 가열

與 "직권 상정" 野 "지명철회" 타협 난망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동의 문제를 놓고 여당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9월 정기국회 및 추후 정국에서의 여야간 기선잡기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 후보자 지명절차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직 사퇴 문제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사전에 조율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돼 새로운 국면 전개도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 "사퇴 후 임명 대법원, 헌재와 사전조율"**=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11일부터 14일 사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측에 전 후보자의 재판관직 사퇴와 임기논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전 후보자가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었던 만큼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는 '3 : 3 : 3 원칙'이 깨지고 대법원장 몫이 1명 줄어들 것을 우려해 사퇴후 재지명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잔여임기 3년의 헌재소장이 임명될 경우 기관의 위상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재판관직 사퇴후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년이냐 6년이냐 임기문제를 놓고 헌재에 물어봤더니 3년으로 할 경우 불안정한 임기, 헌재의 위상, 3년뒤 헌재소장 임명 문제 등을 이유로 6년이 좋겠다는 연구결과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가 전 후보자의 재판관직 사퇴 문제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사전 조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지명절차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의 극적인 타협**=일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타협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청와대가 새 헌재소장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청와대와 여당이 인사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백기항복을 하라는 요구와 다름없어 여권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열린우리당은 인사청문 특위가 전 후보자에 대한 심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 후보자에 관한 표결 불참' 방침을 세운 한나라당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 임채정 국회의장이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이다. 14일 본회의 전까지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극적인 타협이 도출되지 않는 한 여권은 민주당 등 소수 야당의 협조를 기반으로 이같은 우회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이 우리당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본회의에 참석 의결정족수를 채워 줄 것인지는 미지수다. 또한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무리수를 둘 것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재정자립도 광주·강진 꼴찌 광주·전남 지방재정 악화일로

전국규모 올 첫 100조 넘어서 지방세 수입 61% 수도권 집중

지방재정이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전체 지방세 수입의 61%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재정 불균형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6년 일반회계 예산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산정한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54·1%에 머물렀다. 전남도 역시 도 단위 최저치인 13.6%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도 22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아 11개 기초단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41개에 이르렀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6년 지방재정의 규모는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을 합쳐 2005년보다 9.7% 증가한 101조 3천522억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반회계 예산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54.4%로 작년대비 1.8%포인트가 떨어져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서울시가 93.3%로 가장 높았고 강진군이 7.8%로 가장 낮았다. 단체별 최고 최저는 ▲광역시 대전 71.0%, 광주 54.1% ▲도 경기 68.8%, 전남 13.6% ▲시 성남 72.4%, 남원 11.3% ▲군 울주 50.5%, 강진 7.8% ▲자치구 서울 서초구 90.4%, 대전 동구 15.6% 등이었다.

특히 자체수입 가운데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는 250개 지자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51개나 됐다.

전남의 경우 지방세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4개 시지역에 불과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 7.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강진을 비롯해 곡성(8.7%), 고흥(9.2%), 장흥(8.5%), 함평(9.4%), 신안(8.6%) 등 6개 군은 10%미만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반영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세 체계가 재산과세 위주로 돼 있어 지방세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이 세출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교부세와 보조금 등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06년 세수는 국세 79%, 지방세 21% 인데 비해 재정사용액 기준으로 지방이 전체의 54%를 차지, 중앙의 46%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2006광주·전남재정자립도

(단위:%)

광 주		
구 분	재정자립도	자체수입 대비인건비 해결현황
광 주	54.1	○
동 구	20.3	○
서 구	25.4	○
남 구	17.7	○
북 구	22.1	○
광산구	26.0	○

전 남		
구 분	재정자립도	자체수입 대비인건비 해결현황
도	13.6	○
목 포	27.7	○
여 수	30.6	○
순 천	28.8	○
나 주	11.4	×
광 양	48.7	○
담 양	13.2	○
곡 성	8.7	×
구 례	11.1	×
고 흥	9.2	×
보 성	10.5	×
화 순	17.2	○
장 흥	8.5	×
강 진	7.8	×
해 남	10.4	○
영 암	12.8	○
무 안	10.3	×
함 평	9.4	×
영 광	18.1	○
장 성	11.1	×
완 도	11.3	○
진 도	10.4	○
신 안	8.6	×

전남도 관계자는 "산업화에 뒤진 전남은 재산과세 중심의 현행 지방세 체계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 밖에 없어 재정운용에 각종 부작용을 빚고 있다. 지자체간 지방세원 격차 해소를 위해 세목교환 추진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 작업도 함께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동북공정 양국관계 악영향" "정부차원서 조치 취하겠다"

盧대통령, 中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핀란드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오전 (한국시간 10일 오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과 관련, "학술연구기관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헬싱키 전시장에서 원자바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합의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원 총리는 이에 대해 "양국간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며 "관련 학술기관에는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잘 다루도록 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과 원 총리의 회담은 중국측 요청으로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50분 동안 이뤄졌다.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9.19 베이징 공동성명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상호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불신을 해소하면서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원 총리는 특히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면서 중국도 최근 북한의 자연 재해와 관련해서 식량과 디젤유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헬싱키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회의장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한중 양국간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 총리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으며,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여수박람회·경남 람사총회 상호 협력"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 지사회의

지난 9일 끝난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 지사회의에서는 공동 발전과 교류협력 증진에 더욱 노력한다는 약속이 이뤄졌다.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12세계박람회 여수유치'와 2008년 경남의 람사총회 성공 등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에 뜻을 같이 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한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 지사들은 지난 8일 영암군 삼호읍 '목포 현대호텔'에서 채택한 공동성명문에서"천혜의 해양자원과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여수에서'2012년 세계박람회'가 유치되기를 공동으로 지지하고 주민친선 이벤트 사업의 하나로 내년 여수 국제청소년축제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또 8개 시도현 지사는 2008년 경남에서 개최되는 람사총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하며 세계적으로 귀중함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에게 열려있는 지사 교류회의'를 표방하고 주민대표 20여명을 초청, 일본측 지사와 양 지역의 현안에 대한 대화의 자리도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이한철 전남관광협회장은 나가사키현 지사에게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박람회에 대비해 일본, 부산, 목포를 거쳐 상하이까지 이르는 크루즈관광 코스 개발을 제안,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한편 내년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 회의는 일본 사가현에서 열린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